

고령층(60세 이상) 노동시장의 특징과 경제활동의 변화

임 용 빈*

I. 머리말

고용이 둔화되었던 2018년을 지나 점차 고용이 회복되려고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재의 상황까지 60세 이상 고령층¹⁾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1~6월 평균) 기준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40.2%로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했고, 70세 이상의 고용률은 24.4%로 1.7%p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조기확대시행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크지만 그 외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노동시장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능한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수급과 경제활동연령 시기에의 노후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이전소득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으로 보전하려는 고령층이 많은 만큼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고령층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소득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고 더불어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bim@kli.re.kr).

1) 본고에서 고령층은 60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증가되면서 정년보호규정에서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연령대상자는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징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조기확대지원

2019년 상반기(1~6월 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45천 명 증가했는데 그중 65세 이상 취업자는 206천 명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 137천 명 증가한 것에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이라

〈표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특성(2018년 기준)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지원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	시니어 인턴십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		
전체(명)		449,359 (49,260)	52,153 (5,573)	15,445 (2,879)	19,397 (2,169)	19,743 (-15,036)	20,067 (3,028)	5,686 (418)
연령 대별	60~64세	0 (0)	5 (5)	1,199 (316)	2,741 (503)	1,647 (12)	6,595 (1,580)	3,035 (538)
	65~69세	46,044 (1,097)	7,359 (-934)	2,945 (577)	5,368 (526)	4,435 (-2,362)	6,928 (965)	1,658 (10)
	70~74세	117,872 (8,332)	16,920 (1,436)	4,355 (758)	5,912 (586)	6,580 (-4,811)	4,243 (517)	677 (-104)
	75~79세	171,759 (17,572)	17,715 (2,073)	4,454 (684)	4,025 (293)	5,226 (-5,908)	1,790 (-49)	273 (-25)
	80~84세	92,448 (17,086)	8,538 (2,317)	2,001 (459)	1,155 (216)	1,637 (-1,798)	413 (8)	39 (-1)
	85세 이상	21,236 (5,173)	1616 (676)	491 (85)	196 (45)	218 (-169)	98 (7)	4 (0)
성별	남성	126,419 (8,139)	29,762 (2,642)	3,964 (714)	5,757 (156)	4,245 (-3,655)	11,445 (2,427)	3,754 (412)
	여성	322,940 (41,121)	22,391 (2,931)	11,481 (2,165)	13,640 (2,013)	15,498 (-11,381)	9,622 (1,601)	1,932 (6)
참여개월(개월)				8.2	8.6	8.0	5.4	
임금(원/월)		270,000	100,000	278,557	371,298	247,765	1,298,676	1,615,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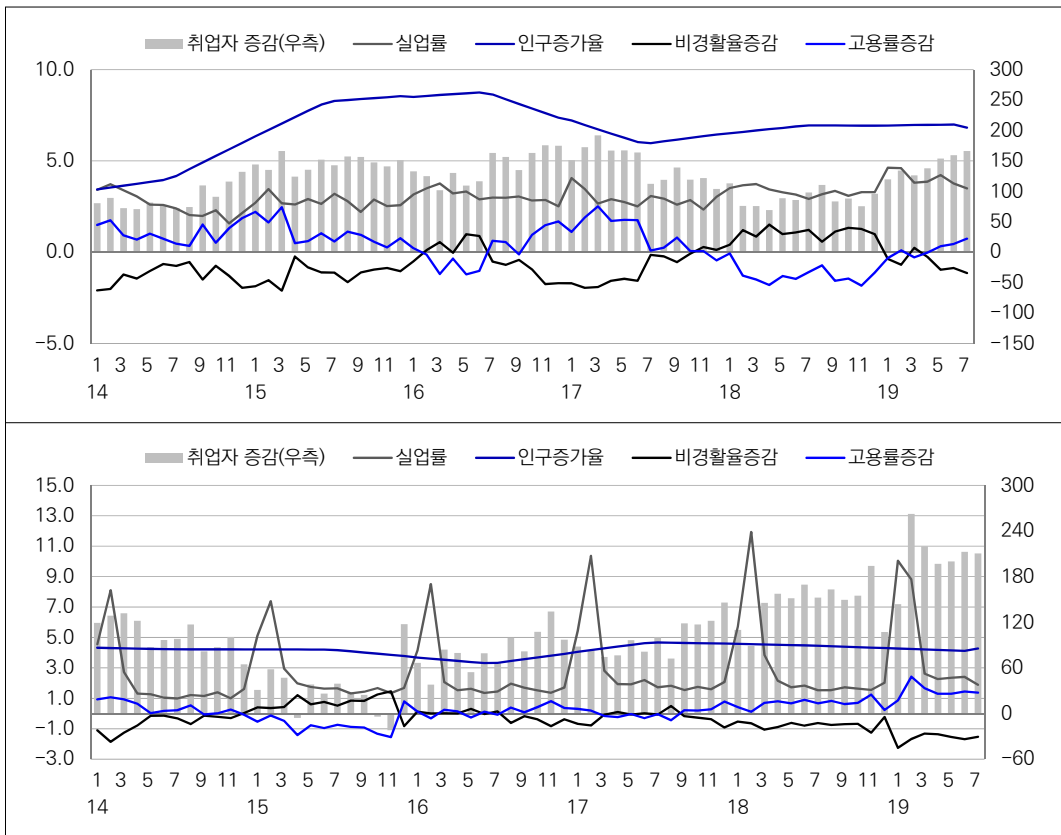
주 : 여기서 참여자는 누적참여자를 의미하며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8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고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층의 취창업(인력파견 및 시니어인턴십, 시장형사업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지원’과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활동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사회활동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활동지원’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자격이 발생하면서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참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일자리지원’은 참가자격이 확대(60세 이상)된 이후 60대 참가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2월에 참여자를 모집한 후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득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농한기에 불안정한 소득을 이어가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2019년부터 1월에 모집하여 1~2월에 바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실업자는 2019년 1월 전년 동월대비 11만 명 증가했고(70세 이상 9만 명 증가), 2월은 46천 명 감소했다(70세 이상 5만 명 감소). 65세 이상 취업자는 1월 144천 명, 2월 262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1] 60~64세(상단), 65세 이상(하단)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60세 이상 주요 부문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증감		수	증감		수	증감		수
		2018. 1~6	2019. 1~6	2019. 1~6	2018. 1~6	2019. 1~6	2019. 1~6	2018. 1~6	2019. 1~6	2019. 1~6
전 체		85	139	2,103	83	66	1,128	54	140	1,268
산업	농림어업	16	21	233	5	6	201	25	17	408
	제조업	3	9	225	20	3	109	-13	10	51
	건설업	-7	16	210	9	4	64	10	-2	22
	도소매업	25	22	261	-4	15	122	-8	1	128
	운수창고업	22	4	200	4	9	96	5	1	48
	숙박음식점업	1	19	203	10	5	77	3	-3	38
	사업시설관리임대	-14	-20	151	-14	7	125	-6	-2	85
	공공행정	4	11	51	6	6	42	15	37	124
	보건 및 사회복지	16	25	147	18	15	83	23	44	189
	협회 및 기타개인	13	-3	130	1	-6	67	-4	21	71
종사 지위	상용직	65	49	617	26	38	260	-7	14	111
	임시직	16	28	428	33	8	267	31	91	454
	일용직	-21	14	183	6	-22	77	-1	-7	83
	고용원 있는 자영업	19	6	155	14	10	77	8	8	43
	고용원 없는 자영업	-12	37	564	10	27	359	19	27	475
	무급가족종사자	18	6	157	-4	5	88	4	8	102
직종	관리+전문+사무	51	38	355	33	6	130	-1	18	77
	서비스종사자	6	46	301	19	12	125	2	29	105
	판매종사자	23	25	242	-6	14	107	-4	5	97
	기능+장치조립	8	11	518	18	26	231	6	12	101
	단순노무직	-25	-3	460	13	-2	342	28	59	501
실 취업 시간	15시간 미만	7	13	100	11	11	103	49	57	365
	15~35시간	55	45	428	35	18	287	6	69	381
	36~51시간	42	127	1110	36	10	497	3	32	375
	52시간 이상	-24	-41	439	-2	24	224	-4	-16	1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18년 513,121개에서 2019년 61만 개로 10만 개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안전 돌봄이’와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약 20만 명의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치 가운데 5만~6만 명은 사회활동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세 이상 취업자(상반기 14만 명 증가)는 주로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환경개선 봉사 등에 참가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산업으로 분류²⁾되는 것과 관련하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참가자의 육체능력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내외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노무직 취업자 및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취업자 위주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60대 후반 취업자(상반기 66천 명 증가)는 주로 ‘시장형일자리’을 통해 급식도우미, 공동작업장 근무, 등하교 교통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인력파견’을 통해 제조,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별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육체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시간 근무하는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의 취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114만 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5천 명 증가했는데(2018년 상반기 5만 명 증가), 산업별로 농림어업(29천 명), 도소매업(26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10천 명)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원을 두지 않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의 특성상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나 근속기간을 가진 취업자가 증가하는데 1년 이상 근속기간³⁾을 가진 임금근로자는 2019년 상반기 57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천 명 증가했다(2018년 상반기 29천 명 증가).

〈표 3〉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사업유형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목표 일자리		234,088	274,200	371,341	418,900	466,582	513,121
전체 추진실적		291,918	330,167	385,963	429,726	496,200	543,926
전체 목표 대비 추진율		109.2	109.2	103.9	102.6	106.4	106.0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	107.2	108.3	103.9	98.7	106.9	108.0
	재능나눔	-	-	102.4	100.7	99.6	100.5
일자리 지원	시장형사업단	127.9	122.9	115.0	128.6	118.4	110.5
	인력파견	128.5	109.5	97.3	78.7	89.9	87.6
	시니어인턴십	-	-	104.7	105.2	76.3	72.0
	고령화친화기업	-	-	57.3	123.6	83.9	83.9
	기업연계	-	-	-	-	111.0	114.8

주 : 매년 사업유형별로 신설되거나 재분류되는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각 연도.

- 2) 소속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에 따라서 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에 속하거나(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공익활동의 종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음(도서관, 공원 관리 등).
-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기간과 직장 시작기간의 차이.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추진실적이 높았던 만큼 2019년의 노인 일자리사업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활동지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고령층의 재취업을 도모하는 ‘일자리지원’의 실적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통 내수서비스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경기둔화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 60대 초반 연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⁴⁾의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초반에 속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7%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취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자는 2018년 내내 10만 명 내외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 상반기 14만 명의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2019년 8월 154천 명 증가). 2019년 상반기 고용률과 실업률은 59.0%과 4.1%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1%p, 0.6%p 증가하였다. 실업자는 2019년 상반기 21천 명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고용증가와와는 다른 모습이다.

업종별로 보면, 복지 및 요양시설에서 서비스직으로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소매업,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장기화되어 가는 60세 미만 연령대와 달리 6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3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근무하는 취업자가 주로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 들어 낮아졌다. 2019년 5월 기준 60대 초반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 증가했는데, 기존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11천 명 증가하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취업자가 143천 명 증가하였다.

기존에 종사하던 일자리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는 주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에 고용 없는 자영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9년 들어 농림어업, 도소매업은 증가하였고 부동산업,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근무하는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이들의 근속연수는 2019년 기준 20.9년으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계약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자 하는 103만 명 중 48만 명이 70세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새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에서는 기계장치조작,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는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4) 2019년 기준 60대 초반 연령대는 1954~1959년도 출생자를 의미한다.

〈표 4〉 60대 초반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의 특성(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기존 일자리 근무 취업자		705	752	842	920	1,015	1,026	(11)
(비중)		46.0%	45.1%	47.3%	47.3%	49.9%	46.9%	-3.0%p
업종	농림어업	168	158	156	155	181	194	(14)
	제조업	63	78	99	111	115	116	(1)
	건설업	45	42	62	63	83	84	(1)
	도소매업	115	133	134	143	149	166	(17)
	운수창고업	80	77	78	83	94	95	(1)
	숙박음식점업	57	72	86	96	78	85	(8)
	협회 및 기타개인	52	50	72	70	78	70	(-9)
	그 외	125	144	154	200	238	216	(-23)
근속기간(년)		21.3	19.9	20.5	20.2	20.9	20.9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표 5〉 60대 초반 퇴직 후 재취업자의 특성(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퇴직 후 재취업자		829	917	937	1,026	1,020	1,163	(143)
(비중)		54.0%	54.9%	52.7%	52.7%	50.1%	53.1%	3.0%p
현재업종	제조업	76	89	105	109	93	115	(22)
	건설업	90	97	94	148	126	145	(19)
	도소매업	71	75	70	74	96	99	(3)
	운수창고업	70	79	91	85	103	100	(-3)
	숙박음식점업	62	88	90	94	102	119	(16)
	사업시설관리임대	117	139	145	147	130	125	(-6)
	보건 및 사회복지	48	50	58	63	74	93	(19)
현재직종	관리+전문+사무	104	111	116	132	154	186	(32)
	서비스	85	93	93	122	131	168	(37)
	판매직	57	63	63	49	78	89	(11)
	기능직+장치기계조립	189	218	248	281	253	281	(28)
	단순노무직	339	366	356	367	336	373	(37)
과거 종사 직종과 일치 ⁵⁾		32.0%	32.5%	33.4%	34.7%	34.1%	35.9%	1.8%p
경력과 매우 높은 연관성 ⁶⁾		26.1%	28.0%	27.8%	31.0%	28.0%	31.2%	3.2%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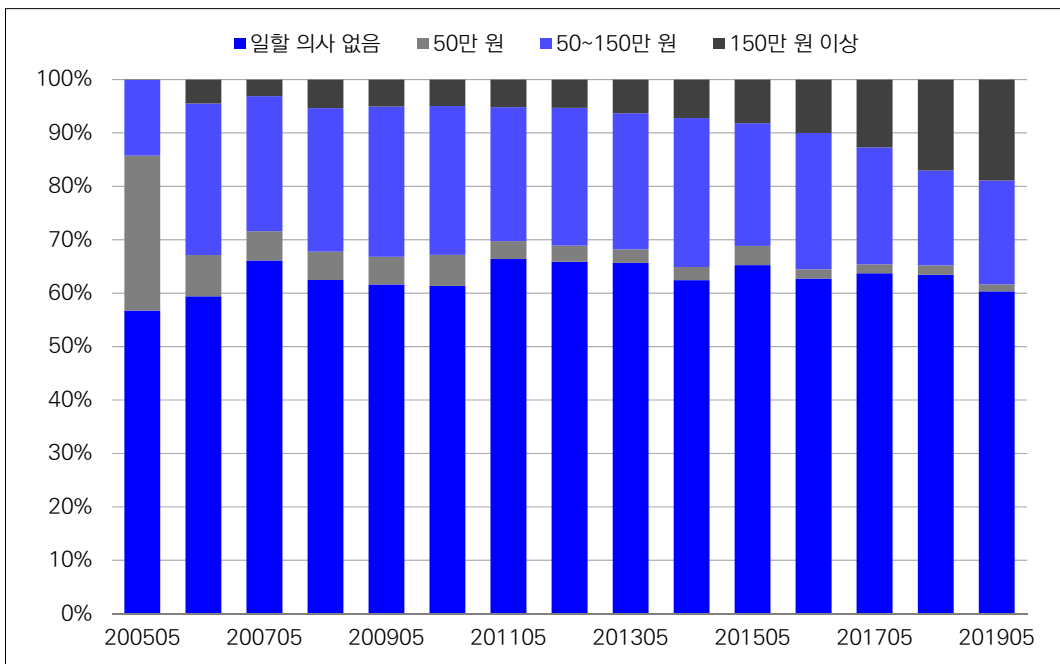
- 5) 현재 종사하는 직종(7차 직업대분류)과 그만둘 당시의 직종과의 일치 여부의 비중.
- 6) 생애 주된 경력과 매우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서비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취업 과정에서 과거에는 종사하던 직종(주로 화이트칼라)과 다른 직종(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주된 경력과 연관성이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재취업자가 많았으나 최근 과거 종사했던 직종과 일치하거나 기존 경력과의 연관성이 높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6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자리에서 계속 일하거나 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취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퇴직 후 상당수 가사활동이나 휴식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60대 초반 미취업자의 40%가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희망하는 월 임금수준은 기존 50만~150만 원 사이에 분포해 있었으나 점차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미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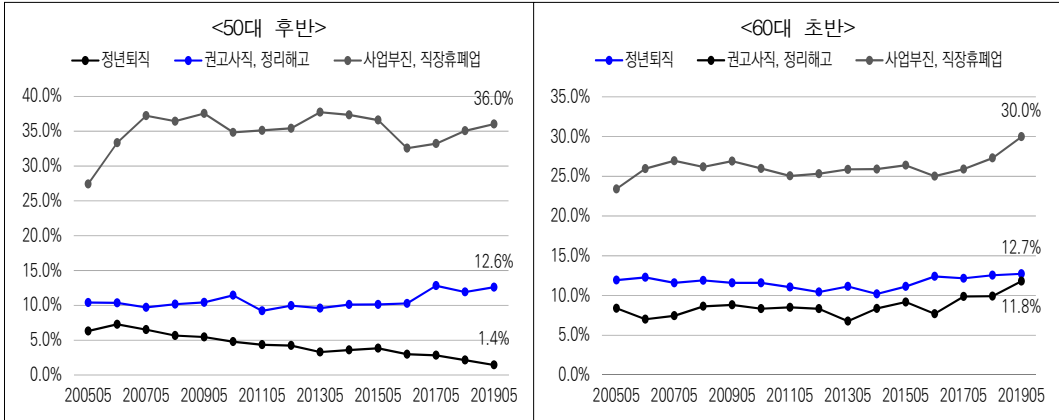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해야 했던(노력규정) 60세 정년이 2016년 이후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정년퇴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퇴직사유를 비교해보았을 때 정년퇴직의 비중은 2016년 법제화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12.7%로 머물러 있는 한편,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인해서 퇴직하거나 사업부진, 직장휴폐업으로 퇴직한 비중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60대 초반 미취업자의 일할 의사 및 희망임금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연령대별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일자리의 퇴직사유 비중 추이



주 :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와 상관없이 과거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만 55~64세 대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III. 고령층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1. 가구별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가구형태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달라지고 있다. 2019년 2분기 기준 가계동향조사에서 384만 가구(노인가구) 중 127만 가구의 가구주가 취업상태로 전년동기대비 13만 가구가 증가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노인가구의 가구주 취업자도 6만 가구 증가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취업상태인 맞벌이 노인가구의 수도 4만 가구 증가했다. 지위별로 상용직은 유배우자 가구의 가구주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임시일용직은 단독노인가구 및 배우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된 2009년부터 단독노인가구의 노동참여가 많아져 20% 내외의 고용률이 최대 33.7%(17년 4분기)까지 증가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 계절에 따라 고용률의 변동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자 가구의 가구주는 2012년 이후 43.5%(2014년 2분기)까지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30% 수준까지 떨어지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유배우자 가구의 배우자의 경우 2009년 이전부터 꾸준히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10% 미만의 고용률이 현재 20% 내외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7)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18~64세의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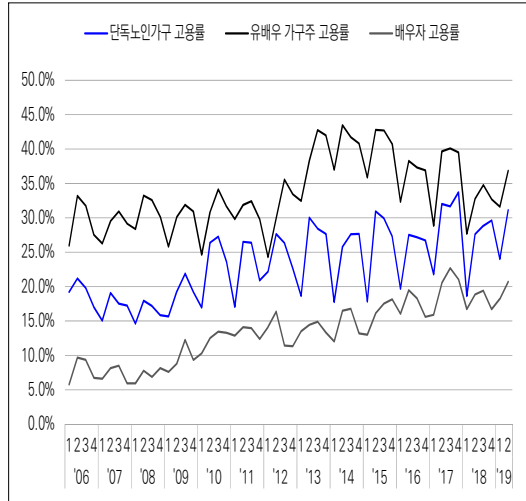
〈표 6〉 배우자 유무별 노인가구의 취업상태

(단위 : 천 가구)

2019년 2분기	배우자 없음	배우자				합계
		미취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미취업	1,668 (-128)	803 (-20)	2 (-9)	87 (3)	14 (-2)	2,574 (-155)
상용직	75 (3)	89 (23)	18 (13)	12 (5)	2 (-2)	195 (43)
임시 일용직	536 (39)	162 (5)	6 (-3)	80 (22)	11 (11)	794 (73)
비임금 근로자	130 (18)	84 (3)	1 (-5)	19 (-5)	46 (8)	280 (18)
합계	2,409 (-67)	1,138 (11)	27 (-5)	197 (24)	73 (15)	3,843 (-22)

〔그림 4〕 배우자 유무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수준이 매월 27만 원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근로소득 변수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노인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 2019년 2분기⁹⁾ 기준으로 31만 가구(개인가중치 기준 39만 7천 명)의 가구주가 월 27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구주가 취업상태로 있는 127만 가구 중 24.5%에 해당하고 있다. 이 중 단독노인가구(23만 가구, 31.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익활동의 내용에 따라 22만 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 15만 가구는 공공행정의 업종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32만 가구가 단순노무직, 7만 가구가 서비스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구주가 근로소득으로 27만 원 미만을 받는 가구는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7만 원을 넘게 받는 가구주는 근로소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대비 1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공익활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가구는 오히려 미취업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과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으로 대표되는 사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2009년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8)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은 2016년까지는 월 20만 원, 2017년 1~3분기 월 22만 원, 2017년 4분기(추경예산) 이후 월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9) 노인일자리사업의 조기확대시행으로 2019년 1분기 27만 원의 가구주 소득을 받는 가구는 5만 4천 가구로 전년동기대비 4만 2천 가구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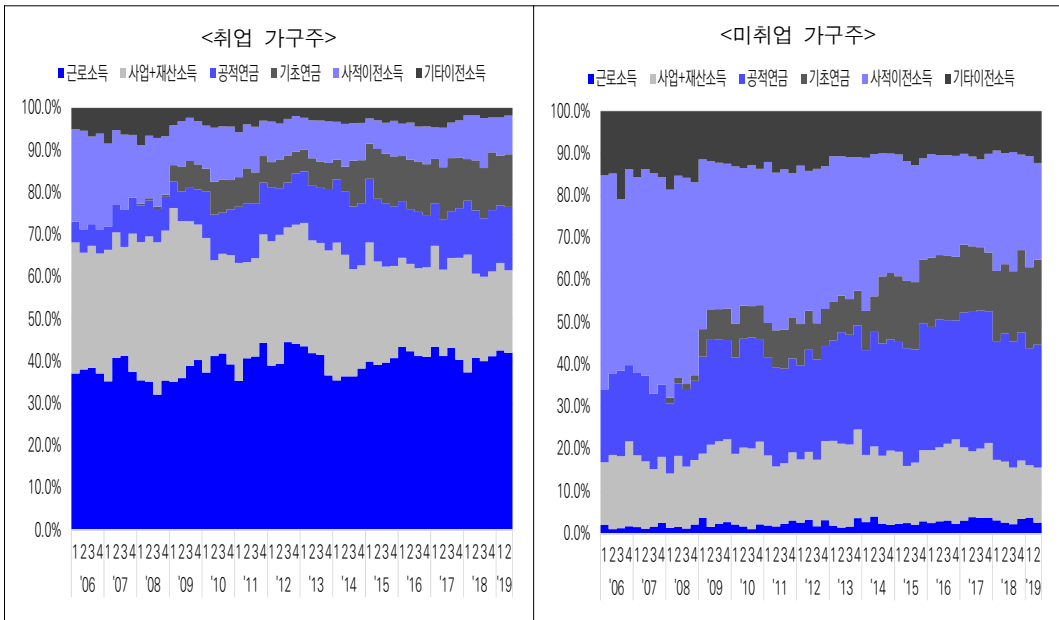
<표 7> 가구주의 근로소득 유형별 분포와 소득수준(2019년 2분기)

(단위 : 천 가구, 원/월 평균, %)

	미취업 가구주 (0원)	가구주 근로소득			전체
		27만 원 미만	27만 원	27만 원 초과	
전체(천 가구)	2,574 (-155)	392(26)	311(7)	566(101)	3,843(-22)
단독노인가구	1,631 (-132)	212(8)	229(5)	295(51)	2,368(-69)
가구원 2인 이상	943 (-23)	180(18)	82(2)	271(50)	1,475(47)
경상소득(원)	1,135,700(6.0)	1,798,878(8.4)	964,514(7.8)	2,513,415(16.8)	1,392,298(12.0)
근로소득(%)	2.6(0.0)	6.8(-1.6)	33.0(-1.2)	61.4(-1.0)	20.5(2.9)
사업소득(%)	10.7(-1.4)	52.7(1.5)	2.8(-0.9)	5.8(1.5)	14.5(-0.5)
재산소득(%)	2.3(0.0)	0.3(-1.1)	0.2(-0.0)	0.7(0.5)	1.5(-0.1)
이전소득(%)	84.4(1.4)	40.2(1.1)	64.0(2.0)	32.1(-1.0)	63.5(-2.3)
공적연금	29.1(-1.2)	13.8(-1.9)	11.5(1.7)	16.4(0.4)	22.7(-1.6)
기초연금	20.1(3.7)	13.4(2.4)	30.9(4.6)	8.1(-0.3)	16.6(2.0)
사적이전소득	22.9(-3.4)	10.3(-0.2)	19.1(-4.1)	6.5(-0.8)	16.7(-3.5)
기타이전소득	12.3(2.4)	2.7(0.8)	2.4(-0.2)	1.2(-0.3)	7.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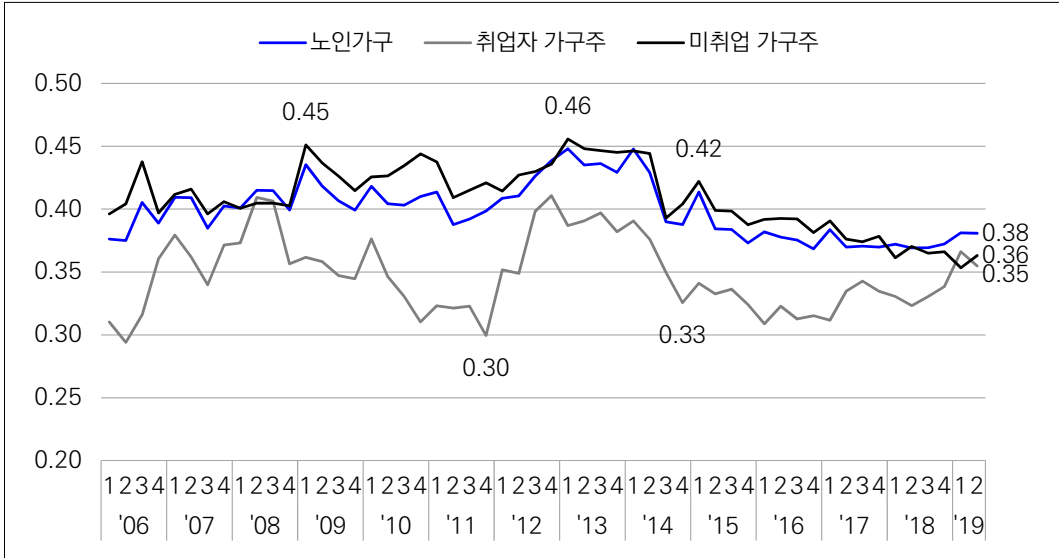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분기.

<그림 5> 취업상태별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



주 : 2017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개정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분기.

[그림 6]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수준(지니계수) 변화



주 : STATA에서 ineqdeco 명령어(User Written Command)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분기.

특히 의존도가 높은 미취업 가구나 공익활동참여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가구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수준 추이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10년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상소득 기준 노인가구의 지니계수¹⁰⁾는 2019년 2분기 0.381로 2009년 2분기 0.426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취업자 가구와 비취업 가구주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을 때 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비취업 노인가구의 특성상 취업자 가구보다 소득분배수준이 좋지 않았으나 최근 비취업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수준은 개선되고 있고 취업자 노인가구의 소득분배는 최근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으로 분해해서 비교한 결과,¹¹⁾ 근로소득의 증가가 전체 소득의 분배수준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던 과거와 달리 점차 근로소득이 분

10) 2016년 이후로 가계동향조사는 공식적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가구균등화한 소득(소득 ÷ √가구원 수)을 가구원 각각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단위(개인가중치=가구가중치*가구원 수)의 분배지표를 작성하였다.

11) Lerman and Yitzhaki(1985)에 의하면 지니계수(G)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하다.

$$G = \sum^k S_k G_k R_k$$

S_k : 전체 소득에서 k 소득의 비중
 G_k : k 소득의 지니계수
 R_k : k 소득과 전체 소득의 상관관계

따라서 k 소득이 1% 증가하게 되면 전체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S_k G_k R_k G^{-1} - S_k$ 만큼 변화하게 된다.

배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이 1% 증가하면 전체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1% 나아지던 2009년과 달리, 2019년에는 13% 낮아지게 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다수 공익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과 재취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근로소득이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적 현물이전과 같은 사회보장기능이 발전하면서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 수준을 2009년 5% 정도에서 점차 24%까지 개선시키게 되는 등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소득원천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

		S_k	G_k	R_k	$S_k^* G_k^* R_k$	$\frac{S_k^* G_k^* R_k}{G}$	$\frac{S_k^* G_k^* R_k}{G} - S_k$
경상소득	19q2				0.381	100.0%	0
	16q2				0.382	100.0%	0
	12q2				0.417	100.0%	0
	09q2				0.426	100.0%	0
근로소득	19q2	0.210	0.725	0.845	0.128	33.7%	0.13
	16q2	0.192	0.638	0.835	0.102	26.8%	0.08
	12q2	0.161	0.540	0.844	0.073	17.6%	0.01
	09q2	0.117	0.410	0.867	0.041	9.7%	-0.01
사업소득	19q2	0.150	0.732	0.891	0.098	25.6%	0.11
	16q2	0.173	0.688	0.890	0.106	27.7%	0.10
	12q2	0.189	0.702	0.879	0.117	28.0%	0.09
	09q2	0.223	0.747	0.865	0.144	33.8%	0.16
재산소득	19q2	0.016	0.605	0.974	0.010	2.5%	0.01
	16q2	0.018	0.521	0.976	0.009	2.4%	0.01
	12q2	0.030	0.570	0.968	0.017	4.0%	0.01
	09q2	0.034	0.646	0.968	0.022	5.1%	0.02
이전소득	19q2	0.624	0.646	0.360	0.145	38.1%	-0.24
	16q2	0.617	0.640	0.416	0.164	43.0%	-0.19
	12q2	0.619	0.684	0.496	0.210	50.4%	-0.12
	09q2	0.626	0.691	0.507	0.219	51.4%	-0.05

주 : STATA에서 digiinis 명령어(User Written Command)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분기.

2. 경제활동에 따른 소비 변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소득이 달라지는 만큼 그것이 어떻게 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지출부문 원자료¹²⁾를 통해 노인가구의 가구주의 취업/상태에 따라 소비품목별로 어떻게 지출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 미취업 노인가구는 평균 107만 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농림어업(A)에 종사하는 노인가구는 115만 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시설지원 임대업 등(B-N)에 종사하는 노인가구는 134만 원으로 지출수준이 높은 한편,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의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업(O-S)에 종사하는 노인가구는 106만 원으로 미취업 가구보다 지출이 낮았다.

〈표 8〉 노인가구의 취업/종사산업에 따른 소득 및 소비품목별 변화(2018년)

(단위: 천 원/월 평균, 전년대비증감)

	미취업 가구주	취업 가구주(산업분류별)			전 체
		농림어업(A)	B-N	O-S	
전체 소비지출	1,066(40)	1,147(14)	1,343(-39)	1,060(67)	1,112(35)
식료품·비주류음료	278(1)	338(9)	334(-4)	301(33)	296(6)
주류 및 담배	11(2)	20(-1)	20(0)	9(-4)	13(1)
의류 및 신발	43(2)	39(7)	62(-15)	56(-3)	46(1)
주거 및 수도광열	224(27)	139(-13)	196(-15)	205(17)	207(16)
가정용품·가사	49(-1)	63(7)	63(1)	49(11)	52(2)
보건	179(22)	206(15)	191(14)	124(-5)	179(17)
교통	75(-2)	119(-4)	119(8)	76(20)	86(1)
통신	34(0)	32(-3)	53(-5)	39(-1)	37(-0)
오락·문화	46(1)	41(-1)	64(-2)	53(10)	48(1)
교육	2(-3)	1(-1)	6(-0)	3(-0)	3(-2)
음식·숙박	68(-2)	79(1)	147(2)	84(3)	81(1)
기타 상품·서비스	57(-7)	70(-3)	88(-24)	61(-12)	63(-8)

주: 1) B-N: 광업·제조업, 전기·하수·건설업,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O-S: 공공행정·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예술·협회 및 개인서비스.

2) 가구균등화된 지출수준 및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반영.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원자료, 201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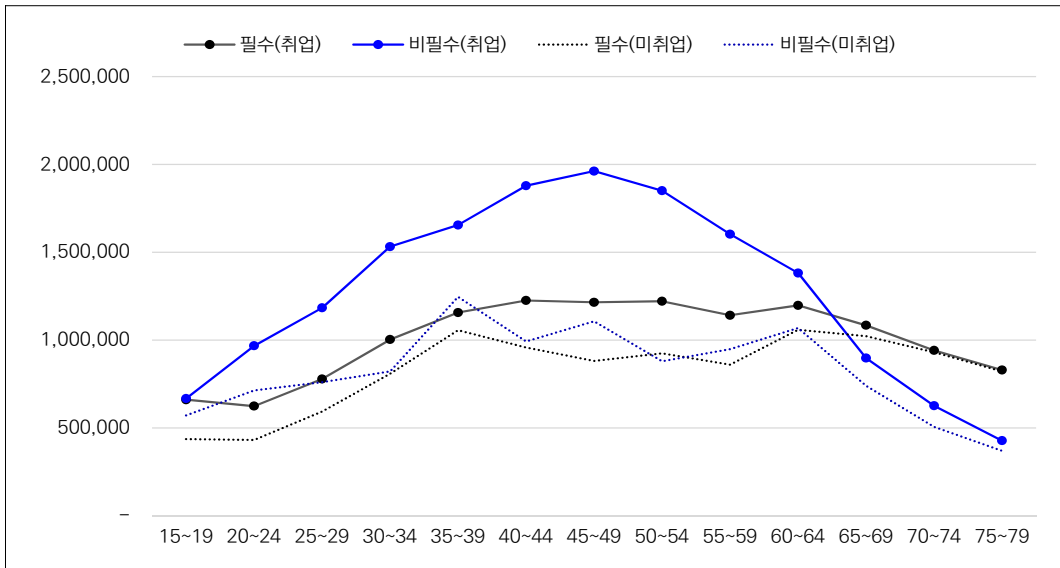
12)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이후 분기별로 소득부문을 조사하고 있고 연도별로 지출부문을 조사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분기별, 연도별로 구할 수 있으나, 분기별로 연결이 가능한 소득부문과 달리 지출부문은 연도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출품목별로 식료품·비주류 음료에서 미취업가구주보다 취업가구주의 지출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거비, 주택유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에 지출되는 주거 및 수도광열은 미취업 가구주에서 지출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 및 통신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품목(work-related)은 미취업가구, 행정·복지 등에서 종사하는 노인가구보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종사하는 노인가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복지 등에서 종사하는 노인가구 보건 관련 지출은 오히려 미취업 가구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등 비교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재화, 서비스에서의 지출이 다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거시경제학 시각에 따라 저축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소비수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Consumption Smoothing).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은퇴와 동시에 소비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Retirement-Consumption Puzzle), 고령층의 건강수준, 정년과 자녀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화에 따라서 지출품목과 지출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에 따른 소비변화는 뚜렷하게 관찰되기 어렵다. 고령층의 취업, 종사업종별로 소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은퇴의 경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연령구간에서 소비지출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비품목을 음식료품, 의류 및 신발, 보건 등 삶에

[그림 7] 연령대별 필수/비필수품의 지출 추이(2018년)



주: 1) 필수품: 음식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용품, 가전용품, 보건서비스.
 2) 비필수품: 주류 및 담배,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재화 서비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원자료, 2018년.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품목(필수품)과 주류 및 담배, 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 등 기호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의 변화가 나타나는 품목(비필수품)으로 나누어 가구주의 취업, 비취업 상태별로 나누어 보았다. 필수품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취업상태별로 지출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필수품은 30~50대에 취업상태에 따라서 지출수준이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60세 이후로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지출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임승차 및 통신요금 할인 등 경로우대정책을 통해 고령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현물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관련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IV. 맺음말

고용시장의 둔화가 길어지는 한편, 고령층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조기확대 시행으로 2019년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후로는 공익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지원으로 보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60대 후반에는 재취업 및 창업지원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의 성과가 사회활동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년연장 이슈의 대상이 되는 60대 초반의 고령층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체력적인 제약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보다 퇴직 후 재취업한 비중이 높다. 60세 정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보다 해고나 실직으로 퇴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취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고령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듯 활발해지고 있는 고령층에서의 노동시장 진출은 고령층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을 늘려가고 있지만 월 27만 원의 지원비를 받는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전체 소득 내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소득의 대부분을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익활동으로 인한 근로소득과 재취업 후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커지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가구가 참여하지 않는 노인가구보다 특별히 지출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특히 무료제공 및 할인이 발생하는 품목은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이들 품목의 지출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다른 품목에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로우대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은퇴와 연금지급시기 사이의 소득절벽 세대에 위치해 있고 본인 스스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60대 초반 고령층의 경우, 재취업 알선, 인력파견 등의 일자리지원은 경기상황, 산업구조의 변

화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층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재취업과 정년연장 가능성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사업과 함께 사회활동지원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익활동, 사회서비스와 같은 활동경로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KL**

[참고문헌]

Lerman, R. I., and S. Yitzhaki(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pp.151 ~156.